

<보도자료> 녹색당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5대 정책 발표

녹색당, ‘탈핵’과 ‘탈석탄’ 두 개의 날개로 난다

“진짜 에너지전환을 하려면”

- (1) 에너지요금 전면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도 인상해야
- (2) 신규 석탄·핵발전 건설 중단, 경주 월성 1,2,3,4 호기 조기 폐쇄
- (3) 에너지전환으로 녹색산업, 녹색일자리 창출
- (4) 지자체와 시민중심 제3대안 전력산업구조 개편
- (5) 환경에너지부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 및 탈핵·탈석탄 에너지기본법 제정

5일, 녹색당은 창당 5주년과 후쿠시마 6주기를 맞아 녹색당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5대 정책을 발표했다. 녹색당은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 ‘핵발전’과 ‘석탄화력’ 비중을 둘 사이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핵발전’과 ‘석탄화력’에서 동시에 벗어날 에너지전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핵발전과 석탄화력은 위험성, 미세먼지, 온실가스, 사후처리 등의 사회·환경적 비용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 경합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벗어나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2012년 3월 4일, 창당한 녹색당은 한국사회 녹색정치와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만든 정당이다. 녹색당은 창당과 동시에 탈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2012년 녹색당 2030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 작성, 2013년 ‘탈원전 및 에너지 전환 기본법안’을 성안하였다. 이렇게 축적된 에너지전환 정책을 바탕으로 녹색당은 격변하고 있는 한국 정치 속에서 ‘탈핵’과 ‘탈석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급진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요관리를 하려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에너지요금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기를 열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은 한 ‘탈핵’과 ‘탈석탄’은 불가능하다. 정당과 대선 예비주자들이 ‘탈핵’을 이야기하면서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전기 요금 인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공약은 거짓말이다. 석탄발전에 탄소세, 핵발전에 핵연료세 부과, 교통·환경에너지세는 진정한 ‘생태세’로 전환해 에너지전환에 사용해야 한다. 에너지요금에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는 독립기구로 에너지요금 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하며, 시민참여하에 에너지원별 요금단가 공개와 재산정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신규 석탄·핵발전 건설 중단은 기본이고, 경주 월성 1,2,3,4 호기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은 백지화하고, 건설에 들어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건설도 중단해야 한다. 무리하게 건설을 강행하려는 신고리 5,6호기와 착공을 앞 둔 신울진 3,4호기는 건설을 중단/포기하고, 계획 중에 있는 영덕·삼척 핵발전소(천지원전 1,2호기와 신고리 7,8호기 해당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또한 건설 중에 있는 신고리 4호 신울진 1,2은 현 수준에서 ‘모라토리움(일시정지)’을 선언해야 한다. 탈핵을 현실화 하려면 핵발전에 대한 조기폐쇄가 이뤄져야 하며, 월성 2,3,4호기는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 폐쇄해야 한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와 같은 수명만료 핵발전소의 즉각 폐쇄는 말할 것도 없다.

셋째, 에너지전환은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로 에너지전환을 산업화 하자. 에너지 자체가 산업인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녹색당은 에너지 전환 산업의 삼총사로 ‘가스를 포함한 분산전원’, ‘에너지 효율서비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제시한다. ‘부동산 불패’ 신화로 부동산에 투자금이 몰리던 것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제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과정의 경제적 이득이 시민과 협동조합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넷째, 지자체와 시민중심의 전력산업구조 개편을 지지한다. 녹색당은 전력산업을 한전과 같이 국가 공기업의 독점구조 하에 공급 위주의 중앙집중적 대규모 시스템을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더불어 대기업들이 전력산업에 진출해 사적 이윤 추구의 장으로 만드는 자유화/민영화 정책도 지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녹색당은 에너지전환과 사회적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 3대안으로 지자체와 시민중심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구상을 제시한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배전/판매 부문을 개방하되 지자체가 설립한 지역에너지공사나 에너지협동조합과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둔 공공성을 갖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경제적 조직에 한정하여 참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발전 등 지역분산 전원의 확대에 부합하는 공적인 배전/판매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에너지 분권과 민주주의가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탈핵과 탈석탄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구조와 제도를 마련한다. 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혁하며, 탈핵·탈석탄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체제에서는 ‘공급중심’ 전력정책과 ‘경제급전’ 방식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해서 전력공급에 있어서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력구매 원칙으로 정책방

향 전면 전환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에너지관련 위원회와 조직구조를 시민참여 중심 구조로 전면 전환, 위원회 참여인사·운영 규정·절차를 개선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탈핵·탈석탄 에너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법에 따라 에너지정책을 집행한다.

녹색당은 탈핵·탈석탄을 위한 에너지전환 5대 정책의 방향을 발표하며, 새정부가 출범하는 6월경 <2030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시나리오>를 대안정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2017년 3월 6일부터 11일까지 녹색당 당원 탈핵행동주간을 시작한다. 녹색당원들이 전국 곳곳에서 탈핵 정당연설회를 열고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집중 진행하며, 3월 11일 후쿠시마 참사 6주기 행사에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녹색당 모든 당원들은 후쿠시마의 교훈을 가슴 깊숙이 새기며, 탈핵과 탈석탄을 위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행동할 것이다.

2017년 3월 5일

녹색당

※ <첨부자료> 2017년 녹색당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5대 정책

2017년 녹색당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5대 정책

차례

1. 현실 진단과 정책 기초
 - ‘탈핵’과 ‘탈석탄’ 두 개의 날개로 날다
 - 전력산업의 조건이 변하고 있다_수요 정체와 경제성 저하
 - 에너지/전력 정책의 ‘이너씨클’이 허물어지고 있다.
 - 대선을 앞두고,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을 밝힌다.
2. 5대 전환정책 - “진짜 에너지전환을 하려면”
 - (1) 에너지요금 전면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도 인상해야
 - (2) 신규 석탄·핵발전 건설 중단, 경주 월성 1,2,3,4 호기 조기 폐쇄
 - (3) 에너지전환으로 녹색산업, 녹색일자리 창출
 - (4) 지역 중심 - 지자체와 시민중심의 제 3대안 전력산업구조 개편
 - (5) 환경에너지부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 및 탈핵·탈석탄 에너지기본법 제정

I 현실 진단과 정책 기초

‘탈핵’ 과 ‘탈석탄’ 두 개의 날개로 날다.

- 2016년 에너지 문제의 키워드 ‘미세먼지’, ‘폭염’, ‘경주지진’.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문제제기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경주 5.8지진으로 영남권에 밀집된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우려와 추가 건설에 대한 국민반대 여론도 급증하고 있음. 핵발전과 석탄화력은 위험성, 미세먼지, 온실가스, 사후처리 등의 사회·환경적 비용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핵발전’과 ‘석탄’ 비중을 시이소 게임하듯이 둘 사이에서 높였다 줄였다하는 것이 아닌 ‘핵발전’과 ‘석탄’에서 동시에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전력산업의 조건이 변하고 있다_수요 정체와 경제성 저하

- 전력산업의 조건이 변화되고 있다. 대규모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유지되기도 힘든 조건들이 강화되고 있음. 산업화/개발주의 시대에서 보여주던 높은 전력수요 증가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조만간 수요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핵/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의 필요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 등으로 전력수요 증가를 이끌어내려고 시도까지 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최근 충분한 안전 검토와 투자도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허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 이 판결은 향후 핵발전소의 안전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을 예고하는 것임. 비슷하게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환경적 비용도 조금씩 반영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반면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경제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음. 이런 변화는 경제성의 측면에서도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이 LNG발전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대해 갖고 있는 우위가 급격히 사라질 것을 예고하고 있음.

에너지/전력 정책의 ‘이너씨클’이 허물어지고 있다.

- 최근에 26개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들이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하였음. ‘미세먼지’, ‘기후변화’, ‘송전탑’, ‘핵위험’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거나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지자체장들이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한 것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과 경기도 2030에너지자립계획과 같이 광역지자체의 에너지정책이 타격을 받고 있음. 한편 많은 시민들이 단순히 소비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혹은 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으로 나서면서, 소규모 분산적인 재생에너지산업에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에너지/전력 정책에 관여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이런 변화는 중앙정부가 일부 전문가와 관료들 중심으로 대규모 핵발전/석탄발전 공급 중심의 에너지/전력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관행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대선을 앞둔,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녹색당은 격변하고 있는 한국 정치 속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 변화를 예민하고 능동적으로 파악하면서, ‘탈핵’과 ‘탈석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급진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여러 대선 예비주자들이 탈핵과 에너지전환에 관한 우호적인 입장을 제시하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 표명이 표계산 속에서 나온 제스처인지 아니면 진정성과 치밀한 계획 속에서 나온 것인지 아직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녹색당은 한국 사회의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을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한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5가지 과제와 정책을 제시한다.

2 5대 전환정책 - “진짜 에너지전환을 하려면”

1. 에너지요금 전면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도 인상해야

- ‘탈핵’과 ‘탈석탄’을 동시에 접근하려면 수요관리를 최우선으로 두면서 재생가능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해야 함.
- 수요관리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에너지요금제도의 전면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기를 열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은 한 ‘탈핵’과 ‘탈석탄’ 불가능.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수요 예측 방식 전환, 에너지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백캐스팅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함.
- 대다수의 정당들과 대선 예비주자들은 폭염 대처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지지한 반면,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전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음.
- (에너지세제 개편 기본방향) 석탄발전에 탄소세, 핵발전에 핵연료세 부과, 교통·환경에너지세는 진정한 ‘생태세’로 전환하여 에너지전환을 위해 사용
- 에너지요금 전면 개편을 위한 독립기구로 에너지요금 산정위원회 운영, 시민참여하에 에너지원별 요금단가 공개와 재산정, 환경사회적 비용 반영, 전기요금 원가 공개

2. 신규 석탄·핵발전 건설 중단, 경주 월성 1,2,3,4 호기 조기 폐쇄

- 수명 만료된 이후 연장 운영되고 있는 핵발전소(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즉각 폐쇄. 이들 노후 핵발전소들의 발전량은 전체 비중에서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발전설비 예비율이 높은 현 상황에서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
-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에 따른 대규모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되는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의 백지화. 또한 건설에 들어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건설도 중단해야 함.
- 무리하게 건설을 강행하려는 신고리 5,6호기와 착공 전에 있는 신울진 3,4호기는 건설을 중단/포기하고, 계획 중에 있는 영덕·삼척 핵발전소(천지원전 1,2호기와 신고리 7,8호기 해당 원전) 건설 계획은 백지화. 또한 건설 중에 있는 신고리 4호 신울진 1,2은 현 수준에서 ‘모라토리움(일시정지)’ 선언.

- 경주지진의 핵심진앙지인 월성에 위치한 월성 1,2,3,4 호기 조기 폐쇄. 탈핵을 현실화 하려면 핵발전에 대한 조기폐쇄가 이뤄져야 하며, 월성 2,3,4호기는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 폐쇄해야 함.
- ‘탈핵’과 ‘탈석탄’을 이루기 위해서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석탄과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려야 함. 현재 한국은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핵발전과 석탄발전만으로 대부분 전력공급 가능한 비정상적인 상황.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가스발전의 역할을 높여야 함. 수도권에도 현재 발전설비로 보면 자립률 117%에 달함. 따라서 수도권의 가스발전 가동률을 높여서 자립률을 높이면, 지역의 석탄과 핵발전소 가동률 줄일 수 있음.
- 2015년 신재생에너지백서에서 태양광 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현재 기술수준으로 쓸 수 있는 최종에너지양으로 기기의 시스템 효율 반영한 값) 7,451기가와트(원전 7,451기와 맞먹는 설비),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 충분하므로, 결국은 투자와 정책의 문제.

3. 에너지전환으로 녹색산업, 녹색일자리 창출

- 신규 석탄과 핵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한 대안은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로 에너지전환을 산업화 하는 것.
- ‘저렴한 전기 공급’ 시대는 끝났음. 에너지는 조선·철강·자동차와 같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 지원하는 역할에서 에너지 자체가 산업인 시대로 전환. 가스열병합을 포함한 분산전원, 에너지서비스 개선, 스마트그리드, 재생가능에너지가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녹색일 자리를 창출해야 함.
- 녹색당은 에너지전환 산업의 삼총사로 ‘가스’, ‘효율서비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제시함.
 - 가스를 포함한 분산전원 확대 정책(에너지전환의 브릿지로 가스 활용) - 기업 상용발전 의무화, LNG발전 용량요금 현실화(난방교차보조 해소)
 - 효율서비스 확대 정책 - 건축물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 -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발전차액제도의 전기요금 반영, 재생가능에너지입지갈등 해소 정책 마련
- ‘부동산 불패’ 신화로 부동산에 투자금이 몰리던 것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함. 에너지전환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기존의 땅과 건물을 가진 사람들만 시장에 진입하는 구조가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방식을 다양하게 설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과정의 경제적 이득이 시민과 협동조합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정책 설계.

4. 지역 중심 - 지자체와 시민중심의 제 3대안 전력산업구조 개편

- 2000년대 초반 발전부문의 분할과 자유화 수준에서 중단되었던 전력산업을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다시 재개되고 있음. 녹색당은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산업은 개발주의 시대의 공공성을 대표하는데 머물러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으로 생산하고 보편적으로 공급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공공성은 낡고 불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개편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함.
- 녹색당은 전력산업을 한전과 같이 국가 공기업의 독점구조 하에 두고 공급 위주의 중앙집중적 대규모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도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그렇지만 전력산업에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사적 이윤 추구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자유화/민영화 정책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 녹색당은 에너지전환과 사회적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 3대안으로 지자체와 시민중심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구상을 제시함.
-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배전/판매 부문을 개방하되 지자체가 설립한 지역에너지공사나 에너지협동조합 등 지역에 기반을 둔 공공성을 유지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경제적 조직에 한정하여 참여하도록 함. 이를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 등 지역분산 전원의 확대에 부합하는 공적인 배전/판매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에너지 분권과 민주주의가 실행되도록 해야 함. 또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에너지전환의 실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한전이 민주적 지배구조를 갖도록 개혁하고 그 활동을 한편 송전망의 유지관리와 지역간 전력거래 등에 국한시키는 한편, 전기위원회가 독립성을 갖도록 개혁하여 전력산업에 진출한 다양한 민간기업을 관리·감독하도록 함.
- 국가에너지 계획수립에 있어서 지자체의 권한을 인정하고 이들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예를 들어 100만kW급 이상) 석탄·핵발전소 및 초고압 송전탑의 건설 및 재가동 시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의무화해야 함. 또한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에너지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포괄예산제로 지원함.

5. 환경에너지부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 및 탈핵탈석탄 에너지기본법 제정

- 정책은 조직, 예산, 법과 제도를 통해 집행됨. 따라서 '탈핵'과 '탈석탄'을 실현할 조직과 논의구조 마련이 중요함.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 체제에서는 '공급중심' 전력정책과 '경제급전' 방식이 절대 변할 수 없음. 따라서 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해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해야 함. 환경에너지부는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력구매 원칙으로 정책방향 전면 전환
- 불법적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함.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에너지관련 위원회와 조직구조를 시민참여 중심 구조로 전면 전환, 위원회 참여인사 운영 규정·절차를 개선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더불어 탈핵·탈석탄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법에 따라 에너지정책을 재구성하고 집행되도록 함.